

민주 도당 “윤석열 파면” 한목소리

전북 총집결 당일결의대회서... 도내 14개 시·군 의장단, 천막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일결의대회’가 12일 오후 5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정현을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단, 기초의원, 정무직 당직자, 당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과 정동영(전주)·한병도(익산)·박희승(임실·순창·남원·장수)·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

은 국회 비상대책위원이어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뜻을 전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극우 세력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경제·민생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14개 시·군에서 천막농성과 거리 피켓 시위, SNS 활동을 통해 파면 촉구 메시지를 확산하고, 100만 광화문 집회로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한병도·박희승·안호영 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 무능과 독선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헌

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민 도당 청년위원회 사무처장(익산시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이 내란에까지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또한 “국민은 더 이상 이를 인내할 수 없으며, 현재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기초단체장들도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로 뭉쳐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민생회복, 헌법수호! 민주당이 앞장선다.”, “하루빨리 내란 종식!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도청 사거리에서는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윤석열 파면 촉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14개 시·군 의장단은 각 지역 의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라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JSIS(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임혁백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처장, 신지식장학회 관계자, 헬프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료용 헴프 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도내 신산업 발전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 Jeonbuk·Saemangeum Innovation Symposi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원, 사단법인 신지식장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임혁백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처장, 신지식장학회 관계자, 헬프 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처장은 “전북은 농생명 산업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헬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며, “헬프 산업을 국내 바이오·의료 산업과 연계해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덕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전북대학교 정재훈 교수가 ‘전북 주도 HEMP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헬프 산업의 필요성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안전한 헴프 사용을 위한 실용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주 대원식품 부대표는 미국의 헬프 산업 사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헬프 관련 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추진 된다면 높은 경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헬프 산업의 진입장벽 해소와 돌파구 마련을 주제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은미 바이오융합원장은 헬프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규제개선과 산업인프라를 중심으로 헬프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으며, 노중균 한국대마산업협회장은 ‘국내 HEMP산업의 경제성 분석 및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헬프 산업의 성장에 맞춰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조동규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헬프가 치매 치료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헬프를 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미래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바이오, 이차전지, 방위산업, 친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전북이 헬프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시장·군수들 “尹 파면 지체 없어야”

전북지역 시장·군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현을 익산시장)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결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헌법재판소가 지체 없는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풀려난 내란수괴는 뻔뻔하게 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앞에만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을 내세우는 내란 검찰은 위법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혼란과 분열에 빠진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며 “윤석열을 동조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시도한 내란정범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의 분노와 규탄이 불길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물러남 없이 도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이 종식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및 구속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전북지역 주요 회원들의 식발식이 이어졌다.

“尹 재구속·헌재의 신속한 파면 촉구”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도내 주요 회원들 식발 투쟁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김용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및 구속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전북지역 주요 회원들의 식발식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전북혁신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앞 천막 단식농성장에서 여성경 공동대표를 비롯한 원주혁신회의의 윤수봉 공동대표(전북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전주혁신회의의 김동우 공동대표, 익산혁신회의의 나갑주 공동대표, 서보현 상임위원 등 5명이 식발식을 진행했다. 식발식을 단행한 전북혁신회의의 여성경 공동대표는 “법과 상식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조치를 결코 인

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이 파면될 그날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혁신회의의 윤수봉 공동대표는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의 재구속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주혁신회의의 김동우 공동대표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멸해가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석방으로 발생한 제2의 내란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익산혁신회의의 나갑주 공동대표는 “윤석열의 석방은 사법 폭동과 검찰 폭동”이라며, “법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식발식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 중인 전북혁신회의의 조지훈 공동대표의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전북혁신회의는 지난 11일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 및 구속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방응송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공동상임대표, 이우규 진안혁신회의의 상임대표, 김진명 임실혁신회의의 공동대표, 최서연 전주시의원, 최정호 익산혁신회의의 공동상임대표 등도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대표단 60~70여명이 릴레이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당 소속 익산시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천막농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12일 오전 익산시의회 청사 1층에서 김경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다. 성명서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오판으로 잡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헌정을 짓밟은 범죄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진 의장은 “윤석열 석방으로 또 다시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속히 내란수괴를 단죄하고 국정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까지 농성으로 맞서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차전지 산업 정책적 지원 시급”

민주 신영대 의원, 오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배터리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자원 확보 경쟁 속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과 박성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연구책임위원 이상휘 위원을 비롯한 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신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차전지 PD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 자급률 제고, R&D 확대 방안, 핵심 원자재 확보 전략 등을 논의한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 지원,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유진테크놀로지,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등 주요 배터리 소재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동영 의원, 전북대 등과 ‘AI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협약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모빌리티 AI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 성균관대, KAIST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네이버 등이 참여했다. 협약식은 AI 기반 제조 혁신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술과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 기관들은 △AI 기반 자율 제조 기술 개발 △미래 모빌리티 연구 협력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AI 기술의 전국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희 기자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파면해야”

민주 이성운 의원 “국민의 감사원으로 되돌려놓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헌법재판소가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선고를 내릴 것에 대해 강조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법률 위반과 직무상 독립성 부정을 이유로 들며, 그의 행위가 감사원법, 국가공무



원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통령 관저 부실감사 및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들을 열거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국민을 배제하고, 윤석열과 김진희만을 위한 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파면이 국민의 감사원으로 되돌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감사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조국혁신당 전북 지역위원장 1차 선정

군산 이주현 전 전북조달청장 등 6개 지역 7명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45개 지역, 총 49명(공동위원장 포함)의 지역위원장을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지역위원장에는 군산시 이주현 전 전북지방조달청장, 익산시(공동) 류인철 현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장, 임형택 전 익산시의회 의원, 김제시·부안군에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남원시에 강동원 전 국회의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양준화 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임실군·순창군에 김광중 현 임실군의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이만호 기자